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즉시	배포일시	2020. 7. 30.(목) 10:00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이민정책연구원 Partner Organization of IOM MRTC		담당부서	연구교육실
		담 당 자	최서리 연구교육실장 02)3788-8031

이민정책연구원, “외국인 · 이민 법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수행
-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가칭)통합이민관리법」 제안 -

□ 이민정책연구원(원장 강동관)은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법무부의 「체류외국인 250만명 시대의 외국인·이민 법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 이 연구용역은 지난 20여 년 동안 출입국자 및 거주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국내 거주 목적이 다양해지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선진화된 출입국 및 체류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개최, 1990년대 금융·무역시장 개방을 계기로 국내 출입하는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고, 2000년대 이후 혼인, 투자, 취·창업, 유학 등 다양한 목적으로 외국인이 국내 장기 거주하게 되었다.

○ 전 세계적으로 국제이동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출입국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2000년대 말 이래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국내

관광산업 발달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출입국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더불어 외국인 유학생의 점진적 증가는 교육산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학사나 취업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다.

□ **1960년대 이래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수준의 외국인력은 괄목할만한 기여를 해왔다. 1960~70년대 재외한인과학자, 1990년대 이래 아시아 출신 노동자 등 시기별로 외국인력은 국내 산업과 기술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수행해 왔다.**

□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우수인재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비영어권 국가인 한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 1963년 연간 (내외국인) 출입국자 규모가 6만 명 정도일 당시 제정된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선언적 규정의 성격이 강한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한 법률안 마련이 시급하다.

※ 2019년 연간 출입국자 규모는 9,355만 명임

□ **「(가칭)통합이민관리법」에서는 범부처 외국인·이주민(해외출생자) 통계DB 통합시스템을 구축 등을 통해 외국인의 유입과 체류에 따른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데이터를 통한 증거기반 정책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국인 관련 행정통계 및 조사통계의 한계로 인해 외국인의 유입에서 정착, 통합까지의 단계별 현황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 이 밖에도 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거주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연계 등을 「(가칭)통합이민관리법」에 제안하고자 한다.

□ 「체류외국인 250만명 시대의 외국인·이민 법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은 올해 12월 결과물이 발표될 예정이며,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법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지속 수렴할 것이다.